



【검토보고서】

2018.11.15(목)
제299회 임시회

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

양주시의회
Yangju City Council

【전문위원 김영현】

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과

가. 제안자 : 양주시장(환경관리과장)

나. 제출일 : 2018년 10월 31일

2. 제안이유

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, 피해예방을 위한 피해방지단의 운영 및 지원으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양주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사항 신설 (안 제18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나. 입법예고 : 2018. 9. 5. ~ 9. 25.(20일간)

다. 부서협의

1) 협의기간 : 2018. 8. 28. ~ 8. 31.(4일간)

2) 협의결과

-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성별영향분석 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규제심사 : 심의대상 아님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개요

- 본조례는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한 인명피해 및 농작물 등의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며,
- 개정안에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사항임

[관계법령]

[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]

제12조(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(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나 농업·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,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·도 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·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·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,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]

제7조(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)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: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울타리·방조망(防鳥網)·경음기(警音器)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

2. 피해보상기준: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·임산물·수산물 등의 피해액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

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라 한다)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·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나. 개정 내용

1)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(안 제18조) 신설

: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양주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구성,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

현행규정	개정안
<신 설>	<p>제18조(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)</p> <p>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“양주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”(이하 “피해방지단”이라 한다)을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피해방지단의 구성은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1조의 3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선발한다.</p> <p>③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, 밀렵감시, 불법포획물 수거 활동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p>④ 시장은 피해방지단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재료비, 활동비, 포획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

[관계법령]

[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]

제23조(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)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상황,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44

조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고 제51조에 따른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,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·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3. 24.>

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13. 3. 22.>

⑦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, 안전수칙, 포획 방법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2.>

⑧ 제5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, 운영시기, 대상동물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4. 3. 24.>

[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]

제31조의3(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등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시·군·구별로 각 하나의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단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,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.

1. 법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 또는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」 제12조에 따른 총포소지 허가를 취득 또는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

2.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 사람

3.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

③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운영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,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2.29.>

④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포획 대상동물은 별표 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로 한다.

2) 시행규칙 (안 제19조)

현행규정	개정안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19조 (현행 제13조와 같음)

다. 종합검토 의견

- 본 조례안은 최근 무분별하게 번식되고 있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
- 본 조례가 시행되면,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되어 우리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